Vol.58

2026.10.20.

정책이슈 리뷰

Policy Issue Review

해외동향 해외 균형발전 정책 동향 9선과 충남의 대응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지역균형 평가항목 개편 p.6
기획예산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백제세계유산 기반 청주국제공항 연계 글로벌 방한 관광 거점 육성 p.1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추진 p.16
기후에너지환경부

외국인 유학생 2만 4천 명 돌파한 부산, 유치에서 지역정착까지 원스톱 지원 p.21
부산광역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K-바이오 랩허브 착공으로 전주기 혁신생태계 구축 본격화 p.23
인천광역시

바이오 대전환과 정주혁신 - 첨단산업, 인재, 생활인구 전략 p.26
충청북도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해외 균형발전 정책 동향 9선과 충남의 대응

출처: 본 내용은 충남연구원 2026 전략과제 수행중 조사한 내용을 요약·정리함

(개요) 모든 지역에 고르게 나누기에서 '거점에 집중하고, 성과로 배분하며, 권한.재원을 실제로 내려보내고, 사람이 머물 조건을 보장하기'로 이동

- (거점 집중) 광역 블록.도시군.특구 단위로 투자를 몰아 성장 엔진을 만드는 방향
  - 일본은 전국 10개 블록에 '전략 17분야' 클러스터, 이탈리아는 남부 8개주를 하나의 경제특구로 통합
- (재원 통합·성과 배분) 칸막이 재원을 묶되 배분은 계획과 성과로 결정하는 방향
  - EU는 약 540개 프로그램을 회원국별 단일 계획으로 통합(기금 총 8,650억 유로), 미국은 500억 달러를 절반 균등·절반 평가로 배분하고 매년 재평가
- (이양의 실효성) 권한·재원을 넘겼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 도달했는지가 쟁점
  - 영국은 3단계 '전략기관'을 법제화, 독일은 특별기금 중 지자체 도달분이 약 12%에 그친다는 분석, 프랑스는 분권 대신 도지사 권한 강화 법안을 냈다가 철회
- (정주권·생활권) 인구 유입 경쟁이 아니라 '떠나지 않아도 되는 조건'과 주민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
  - EU는 약 540개 프로그램을 회원국별 단일 계획으로 통합(기금 총 8,650억 유로), 미국은 500억 달러를 절반 균등·절반 평가로 배분하고 매년 재평가
- (재원 통합.성과 배분) 칸막이 재원을 묶되 배분은 계획과 성과로 결정하는 방향
  - EU는 '머물 권리' 전략을 수립 중, 영국은 낙후 근린 284곳에 10년 장기 재원과 주민위원회 결정권 부여

번호	흐름	국가·기구	정책	주요 시점	핵심 내용
1	거점 집중	일본	지역미래전략	2026.7. 각의결정	10개 블록·17분야 산업클러스터, 교부금 확충
2	거점 집중	이탈리아	남부 단일경제특구	2026 예산법	3년 37.5억 유로 세액공제, 단일 인허가
3	재원 통합·성과 배분	EU	결속정책 재편(NRPP)	2026.6. 이사회 부분 합의	540여 개 프로그램을 회원국별 단일 계획으로 통합(기금 8,650억 유로)
4	재원 통합·성과 배분	미국	농촌보건전환 프로그램	2025.12. 배분 결정	5년 500억 달러, 절반 균등·절반 평가
5	이양의 실효성	영국	잉글랜드 분권법	2026.4. 제정	3단계 전략기관, 시장 권한 확대
6	이양의 실효성	독일	인프라 특별기금	2025 기본법 개정	주·지자체 1,000억 유로, 지자체 도달 약 12%
7	이양의 실효성	프랑스	분권·국가 재편 입법	2026.5. 제출, 6월 철회	권한 명확화 약속과 도지사 강화안 충돌
8	정주권·생활권	EU	머물 권리 전략	2026.5. 수립 착수	인구유출 지역의 정주 선택권 보장
9	정주권·생활권	영국	Pride in Place	2026.4. 1단계 집행	근린 284곳, 10년 최대 58억 파운드

자료: 사례별 문헌을 바탕으로 필자 정리

일본 지역미래전략

- (배경) 지방창생 10년에도 인구감소와 도쿄권 집중이 지속, 20~39세 여성 인구가 2040년까지 절반 이상 줄어드는 시정촌이 1,799곳 중 896곳이라는 추계
  - 다카이치 내각은 2025.11.11. 지방창생 본부를 「지역미래전략본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에 무게를 둠
- (목적) 어디에 살든 일할 곳이 있는 사회를 위해 '강한 지역경제'를 구축, 대규모 투자로 지방 고용을 만들고 인구 유출을 억제
  - (성과 목표) 도쿄권 외 지역의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29년까지 도쿄권 이상으로 제고
- (주요내용)
  - (10개 블록·17분야) 홋카이도~오키나와 10개 블록에 반도체·AI·조선 등 '전략 17분야' 클러스터 형성
  - (3층 계획 체계)
    - (국가) 전략산업클러스터 계획: 구마모토 TSMC·홋카이도 라피더스형 대규모 투자 중심, 장애 요인·정부 대응·KPI 명시
    - (도도부현) 지역산업클러스터 계획: 지자체가 작성하고 국가가 확인, 예: 아이치현 차세대 모빌리티·항공우주·수소 등 8개 분야
    - (시정촌) 지장산업 성장플랜: 지역 토착산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판로 개척

이탈리아 남부 단일경제특구(ZES Unica)

- (배경) 남부(메초조르노)의 투자 부진에 대응해 개별 특구를 하나의 남부 단일특구로 통합하고 세액공제를 운영
- (목적)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로 남부 투자를 유치 + 연 단위 연장에서 벗어나 3년 단위 재원을 확보해 기업의 중기 투자계획을 지원
- (주요내용)
  - (재원) 지출 한도 2026년 23억 유로, 2027년 10억 유로, 2028년 7.5억 유로
  - (대상 지역) 기존 남부 8개 주에 2026년부터 마르케·움브리아 지원 대상 지역 추가
  - (지원 수준) 소기업 기준 캄파니아·칼라브리아·풀리아·시칠리아 최대 60%, 바실리카타·몰리세·사르데냐 50%, 아브루초·마르케·움브리아 35%(투자사업당 최대 1억 유로까지 인정)

EU 결속정책 재편: 국가·지역 파트너십 계획(NRPP)

- (배경) 결속정책과 공동농업정책이 약 540개 국가·지역 프로그램으로 분산 집행
- (목적) 14개 국가·지역 프로그램을 하나의 틀로 묶어 전략적 일관성과 집행 효율성 제고 + 투자와 개혁을 연계해 회원국이 일관된 지역 결속 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
- (주요내용)
  - (규모) NRPP·Interreg·EU 퍼실리티 합계 약 8,650억 유로
    - NRPP 7,830억 유로, Interreg 102억 유로, EU 퍼실리티 720억 유로
    - 저개발 지역 2,180억 유로(현행과 동일)와 사회 목표 최소 1,000억 유로를 의무 배정
  - (배분 원칙) 국민총소득·지역 GDP 등 핵심 지표로 배분하고, 전환·선진 지역에는 사전 배정 없음
    - 국가 분담 비율: 저개발 15%, 전환 40%, 선진 60% 이상
  - (쟁점) 유럽의회 4개 교섭단체 대표는 원안을 협상 출발점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 15개 회원국도 원안에 이견

미국 농촌보건전환 프로그램(RHTP)

- (배경) 2025년 연방 세출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으로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재원 활용이 제한되고 연방 매칭이 축소
- (목적) 농촌의 예방 보건,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인력 확보, 혁신적 의료 모델, 신기술 도입 촉진
- (주요내용)
  - (규모) 2026~2030년 5년간 총 500억 달러, 매년 100억 달러
  - (배분 방식) 절반은 모든 승인 주에 균등 배분, 나머지는 전문가 평가 점수로 배분
    - 1차 연도 주별 평균 약 2억 달러, 최소 1.47억 달러(뉴저지)~최대 2.81억 달러(텍사스)
  - (사용 조건) 11개 승인 용도 중 3개 이상 선택 필수
    - 예방·만성질환 관리, 의료기관 지급, 소비자용 디지털 기술, 인력 확보(농촌 5년 근무 약정), 의료체계 적정화, 행동건강 등
    - 의료기관 직접 지급은 연간 배정액의 15% 이내로 제한
  - (관리) 연도 내 집행 원칙, 주별 CMS 담당관 지정, 연차 보고와 매년 재평가
  - (쟁점) 주정부가 지역 의료기관에 재원을 배분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우려

영국 「잉글랜드 분권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법」

- (배경) 잉글랜드의 권한 이양은 지역별 개별 협상으로 진행되어 기능이 지역마다 상이 + 정부는 「잉글랜드 분권 백서」의 입법 과제를 이 법으로 구현
- (목적) '전략기관'을 법률에 도입해 중앙 권한을 보다 신속하게 지역으로 이양하고, 지역 경제전략을 국가 정책과 정렬
- (주요내용)
  - (전략기관 3단계) 기초 → 시장형 → 성숙 시장형으로 단계별 권한 부여
    - 광역런던청·연합기구·카운티 연합기구를 전략기관으로 포괄
  - (시장 권한) 교통·계획·주택·지역재생 권한 확대
    - 전략적 개발 신청 개입, 시장 개발명령, 시장 기반시설부담금, 강제수용 권한, 차입 권한 명시
  - (의무) 시장형 전략기관의 지역성장계획 수립 의무화, 건강 불평등 고려 의무 신설
  - (지역사회) 지역 자산 매각 시 주민 우선 매수권(Community Right to Buy), 보도 주차 단속·공유 전기자전거 면허 권한 도입
  - (쟁점) 상원 반발로 연합기구 설립·시장 도입을 강제하는 장관 권한은 삭제되고, 잔여 확대 권한도 4년간 미사용 약속

독일 인프라·기후중립 특별기금과 지자체 재정

- (배경) 공공 인프라의 구조적 결함과 2045년 기후중립 목표 대응을 위해 대규모 재원 필요 + 2026년 지자체 투자 적체는 2,310억 유로로 사상 최대, 재정 상황이 '좋음' 이상인 지자체는 12%
- (목적) 공공 인프라 결함 해소와 경제성장을 위해 연방이 주·지자체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
- (주요내용)
  - (규모) 1,000억 유로를 12년간 주정부에 배정, 쾨니히슈타인 기준으로 주별 배분
  - (지자체 몫) 각 주가 결정, 초안의 '지자체 몫 최소 60%' 규정은 최종안에서 삭제
    - 지원 분야: 재난 대비, 교육, 보육, 디지털화, 병원, 교통, 에너지·열, 연구개발 등
  - (도달률 논란) ifo 연구소는 차입 재원 중 지자체에 도달하는 비율이 약 12%라고 분석
    - 주정부의 지자체 전달률은 평균 약 60%, 라인란트팔츠 72%~튀링겐 43%로 편차
  - (현장 기대) 2026년에 특별기금 효과를 기대하는 지자체는 약 22%, 2027년은 38%

프랑스 분권·국가 재편 입법

- (배경) 르코르뉘 총리는 2025년 9월 취임 이후 분권과 권한 명확화를 임기 과제로 제시 + 지방 측은 재원 없는 권한 이전이라면 전면 대립하겠다는 입장
- (목적) (권한 명확화) 공공서비스에 대해 시민이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따질지' 알 수 있도록 국가·지역·기초 간 권한 정리 + (국가 재편) 지역 단위 국가 조직을 정비해 행정 결정을 신속화
- (주요내용)
  - (3개 법안 구상) ① 지방정부 관련 약 50개 간소화·명확화 조치 ② 국가 개혁·분권·권한 명확화 ③ 그랑파리 광역도시 개편
  - (「지역 국가 강화」 법안) 2026.5.20. 국무회의 제출, 새 권한 이전이 아닌 도지사 중심 국가 조직 강화
    - 보조금 신청 단일 창구, 도지사를 국가기관의 지역 대표로 지정 (국토결속청 포함)
    - 지자체 '불이행' 시 도지사 대체 집행권, 국가 국토정비전략(SNAT) 신설
  - (철회) 지방 단체 반대로 2026.6.25. 상원 의사일정에서 철회, 같은 날 상원은 「지방정부 적용 규범 간소화 법안」 가결 + 연말까지 법안 제출 계획

EU 「머물 권리(Right to Stay)」 전략

- (배경) 농촌·원격지·도서·산악·접경 지역이 경제 쇠퇴와 인구 유출에 특히 취약, 청년 유출이 '발전의 덫'을 심화 + '모든 시민이 고향에 머물 권리'를 우선순위로 설정
- (목적) 기회 부족 때문에 떠나야만 하는 상황을 막고, 지역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규명 + '머물 권리'는 법적 권리가 아닌 정책 의제라는 것이 집행위의 설명
- (주요내용)
  - (근거 조약) TFEU 제174조: 지역 간 발전 격차와 낙후 지역의 후진성 축소, 인구 희소 지역 등에 특별한 주의
  - (문서 형식) 집행위원회 정책 문서(Communication), 2026년 4분기 채택 예정
  - (재정 연계) 2028~2034 MFF 제안에 '머물 권리'가 별도 개발목표로 반영
  - (수립 착수) 2026.5.6. 유럽의회 출범 행사와 함께 의견수렴 개시, 기한은 6.5.에서 6.12.로 연장
  - (대상) 일자리 부족, 디지털 인프라 미비, 교육·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
  - (조치 방향) 인구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을 식별하고 주거·교통을 포함한 성장 조치 제시

영국 「Pride in Place」

- (배경) 낙후 근린에 대한 장기·안정적 투자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존 근린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
- (목적)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 + 10년 재원을 보장해 사업 종료 후에도 남는 변화를 창출
- (주요내용)
  - (규모) 낙후 근린 284곳에 10년간 최대 58억 파운드, 지역당 최대 2,000만 파운드
    - 1단계 재원 구성: 자본비 75%, 운영비 25%
  - (배분 방식) 공모 경쟁 없는 대상지 지정, 1단계 75곳·2단계 169곳으로 시작해 1단계는 2026년 4월 집행 개시
    - 2026년 2월 40곳(8억 파운드) 추가
  - (주민 주도) 주민·기업·지역단체로 구성된 근린위원회가 보도·상가 거리·문화·녹지 등 쓰임새 결정
  - (초기 평가) 2026년 9월 첫 실행 평가에서 재원 이양과 주민의 실질적 영향력 사이 간극 지적
    - 성과를 투입액·사업 실적이 아닌 공동체 역량·관계·자신감 변화로 판단할 것을 제안

한 상 욱 지역도시연구팀 선임연구위원

✓ (충남 여건) 세 층위의 과제를 동시에 보유

- (권역) 충청 북부권의 발전축이 수도권으로 흡인되면서 충청권 성장 동력이 분산된다는 분석
- (시군) 공주·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 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 (사업)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 등 특구 정책이 초광역 단위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 지적

✓ (시사점)

- 거점 집중: 충청권 산업클러스터 계획을 충남이 먼저 설계 / 일본, 이탈리아
- 재원 통합·성과 배분: 포괄재원에 '기본 몫+성과 몫'을 설계 / EU, 미국
- 이양의 실효성: 시군 '도달률'과 단계별 권한을 관리 / 독일, 영국
- 정주권·생활권: 인구감소 시군의 '머물 조건'을 지표로 관리 / EU

흐름	실행과제	참고 사례
거점 집중	충남형 지역산업클러스터 계획 수립, 충청권 분야 분담 합의	일본, 중국
	특구 패키지(다년도 세제+단일 인허가) 정부 제안	이탈리아
성과 배분	도 균형발전 재원의 '기본 몫+성과 몫' 시범 배분	EU, 미국
이양 실효성	시군 재원 도달률·집행 시차 연차 공개	독일
	충청광역연합 사무 단계별 확대 로드맵	영국, 프랑스
정주권	인구감소 9개 시군 '머물 조건 지표' 설정	EU
	읍면동 다년도 포괄재원·주민위원회 시범사업	영국

기획예산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지역균형 평가항목 개편

출처: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 2026.0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지역균형 평가항목 개편 및 세부 운영 방안」, 2026.06.30.

1.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개편 배경

- (개요) 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26.3)을 발표하고, 「예타 운용지침」·「예타 수행 총괄지침」(시행 '26.5.29.)을 개정하여 정책성·지역균형 평가항목을 개편함 (※ '26.1월 이후 사업부터 적용)
- (정책성 한계) 정책효과 평가가 SOC 중심(일자리·생활여건·환경성·안전성·사업특화) 5개 항목으로 고정되어 사회·문화·산업 분야 사업 특성 반영이 어렵고, 사업 고유 목적은 '사업특화항목' 1개로만 평가 가능
- (지역균형 한계)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로 권역 내 특수성 고려가 불충분하고, 지역낙후도·낙후도 개선효과·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정량지표에만 의존해 정성적 '지역 성장 기여도' 평가가 곤란

2. 정책성 평가항목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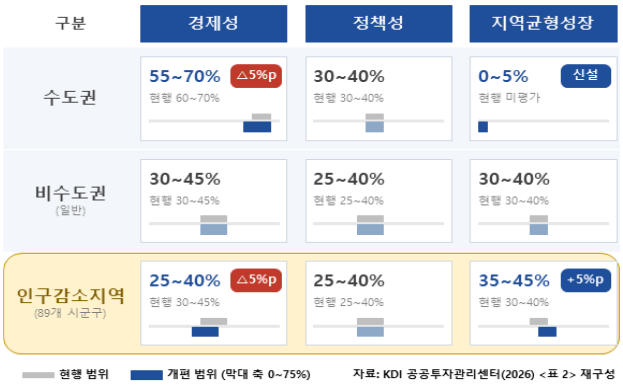
- (정책효과 개방) 부처가 사업 목적과 특성을 자율 제시하도록 정책효과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파급효과' 3개 항목으로 재편
  -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성 제고, 산업·일자리, 지역경제 파급효과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표 기반 IRIO 모형 원칙)
  - 사회적 파급효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 삶의 질 개선 등 공공이익 기여 효과
  - 환경적 파급효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오염 저감대책
- (사업계획 적절성 신설) 사업추진 준비정도를 점검하는 평가항목이 부재하여, 유사시설 운영성과를 고려한 운영계획 적절성과 사업주체의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내부·외부 여건은 통합

3. 지역균형 평가항목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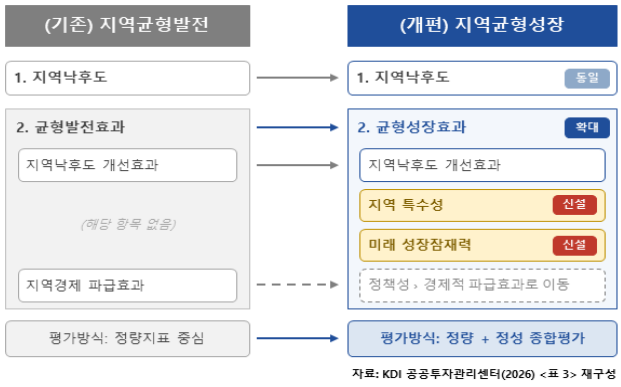
- (인구감소지역 가중치 상향) 비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상 89개 시군구)을 별도 구분하여 경제성 가중치 △5%p(25~40%), 지역균형 가중치 +5%p(35~45%) 적용
- (균형성장효과로 확대) '균형발전효과'를 「균형성장효과」로 개편하여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에 지역 특수성·미래 성장잠재력(신설)을 더해 정량+정성으로 평가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정책효과로 평가 항목 간 이동

4. 시사점

- 이번 개편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은 지역균형 가중치가 최대 45%까지 높아져, 경제성(B/C)이 낮은 SOC·문화관광·의료 사업의 예타 통과 여건이 개선됨. 다만 균형성장효과의 평가 결과에 좌우되는 특징이 있음
- 반면 정책효과와 균형성장효과의 정성 평가 요소가 확대되고 사업계획 적절성이 신설되어, 사업 논리와 운영·재원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했는지가 핵심 변수임
- 따라서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시군을 구분한 예타 대응 전략과 사전 기획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개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 가중치 비교



지역균형 분석 평가항목 개편 내용

김 형 철 미래공간연구실 연구위원

✓ 도내 인구감소지역(충남 9개 시·군)은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으로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대상 사업 발굴, 지역 특수성과 미래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할 기초자료 구축 등이 필요

✓ 도·시·군, 충남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충남 예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별 TF를 통해 ①기획 단계의 운영주체·운영비·국도비 분담 협의, ②사업계획 적절성 사전 점검, ③정책효과·균형성장효과 논리 구축 등의 일괄 지원 체계 마련 필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기반 차등 배분 도입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기반 차등 배분 도입으로 성과 높인다", 2026.11.11.

광역지원계정 평가 개요

- (대상) 15개 시·도(서울과 세종은 제외)
- (규모) 광역지원계정(2,500억 원) 중 500억 원

기초지원계정 (75%, 7,500억)	인구감소지역 92개(95%, 7,125억)
	관심지역 18개(5%, 375억)
광역지원계정 (25%, 2,500억)	지역 여건을 반영, 산식에 따른 배분(1,500억)
	투자계획 평가기반 차등 배분(500억)
	지역활성화투자펀드(500억)

- (기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사업 설계의 적합성 및 광역-기초 또는 기초 간 연계·협력 등 광역 차원의 전략을 종합 평가
  - 사업의 적절성, 광역 전략의 적합성, 사업의 구체성, 추진체계 등 검토
- (절차) 시·도가 투자계획을 작성하고, 조합에서 투자계획을 평가 후, (1차서면+2차질의·응답)하여 시·도별 배분등급 결정
- (배분 등급) 4개 등급

등급	배분액	지역 수
최우수	66억 원	2개
우수	34억 원	6개
보통	26억 원	5개
양호	17억 원	2개
총	500억 원	15개

- (향후 계획) 기금관리조합에서 광역 지방정부에 기금 배분 (10. 30. 예정)

광역지원계정 최초로 투자계획 평가 도입

- 그간 광역지원계정은 인구·재정여건에 따른 산식에 근거해 자동 배분되었으나, 올해부터 광역 차원의 기금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 원에 대해 시·도가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
- 이번 평가는 시·도가 지역전체의 관점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하고, 시·군 간 연계·협력을 통해 광역 차원의 성과를 창출하는 등 광역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핌
  - 구체적으로 ▲시·도의 실질적인 기획·조정 역할 ▲광역 단위 추진의 필요성·효과 ▲지역 여건·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 ▲사업의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음

강원·충남 최우수, 15개 시·도에 차등 배분

- 평가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어 각각 66억 원을 배분받게 됨

등급(지역수)	지역
최우수(2)	강원, 충남
우수(6)	부산, 대구,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보통(5)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북
양호(2)	인천, 전남

- 충청남도와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지원하고, 지역 간 연계·협력을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
-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 도입을 계기로 광역지원계정이 개별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를 광역 차원에서 해결하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

최 웅 선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 충남도는 이번 최우수 평가를 계기로 도–시·군 공동기획 체계를 상시화하고, 생활서비스·교통·일자리 등 다수 시·군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데이터와 주민 수요에 기반해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사업별 주민 체감성과와 시·군 간 협력 성과를 관리하는 지표를 마련하고, 성과가 검증된 보령·청양 주민행복마을 및 AI 통합플랫폼 모델을 도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본법」, 「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6.10.13)

(개요) 국가 A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활용을 위한 법안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AI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부사업 등으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는 것이 의무화
- 「데이터산업법」 개정으로 공공·민간 데이터 소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원-윈도우' 연계 협력이 공공기관에 의무화
- 이번 개정 법안은 2027년 4월부터 시행 예정

(세부내용) 데이터 연계 예외 사유 및 지원책

- (연계 제외 사유)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데이터를 연계·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품질 관리 및 지원) 연계·제공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연계된 데이터의 안정적인 품질관리 조치를 시행

(세부내용) 정부사업 AI 학습용데이터의 'AI허브' 연계 의무화

- (주요내용) 정부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를 대규모 데이터 개방 플랫폼인 'AI허브'에 연계 및 제공하도록 의무화
- (추진 목적) 대학이나 중소기업 등이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학습용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개방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내용) 공공·민간 데이터 소재 정보의 '원-윈도우' 연계 강화

- (주요내용)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에 단일 창구 통합 데이터 플랫폼인 '원-윈도우' 구축·운영을 위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의무화: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윈도우 연계 협력 요구에 따르는 것이 의무화

(개념) 'AI허브' 개념

- 국내 AI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중소기업 등에서 자체 확보가 어려운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 구축·개방

※ AI 학습용 데이터 945종 개방 중

(개념) '원-윈도우' 개념

- 국가 전체 공공·민간데이터 플랫폼을 카탈로그 기반으로 연계하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유통 정보를 단일 창구로 제공

※ 공공데이터포털,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등 88개 플랫폼 연계 중

(관련사진)

최 창 규 과학기술진흥본부 정책기획부장

✓ 충남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산출하는 데이터 자산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2027년 4월 법 시행 전 'AI허브' 및 '원-윈도우' 플랫폼 연계 대응 체계를 사전 구축

✓ 정부의 행정·기술·재정적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충남 소재 대학과 중소기업이 연계·개방된 국가 AI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맞춤형 AI 신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성과평가 기반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본격화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지방정부-대학-기업 손잡고 인재 기른다, 지역 주도 지역인재 양성 가속」, 2026. 9. 8.

앵커 도입 1년, 사업성과보다 '성과창출 기반' 중심 점검

- 교육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차 연도 연차점검을 실시함
- 사업 초기임을 고려해 정량적 성과보다는 지자체-대학 협력체계, 사업기획·선정, 성과관리 등 향후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적절히 구축했는지에 중점을 둠

협력체계·지역특화 성과는 긍정적, 과제선정·성과관리체계는 보완 필요

- 지역-대학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과 계약학과 등 지역혁신 성과가 우수사례로 평가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위원회 운영, 과제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의 타당성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됨
- 특히 프로젝트와 단위과제 간 연계 부족, 자율성과지표 편차, 자체평가 결과의 편중 등이 지적됨에 따라 향후 지역별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의 정비가 중요해질 전망임

평가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4,000억 원 성과예산 차등 배분

- 교육부는 연차점검 결과에 따라 총 4,000억 원 규모의 성과예산을 등급별로 차등 배분하고, 기본배분액과 성과예산을 합한 지원 규모를 2025년 기준값 대비 약 80%에서 최대 120% 수준으로 차등화할 계획임
- 이에 따라 향후 지역대학 지원정책은 사업비의 균등 배분보다 성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지방정부의 사업기획·성과관리 책임도 더욱 강화될 전망임

자체평가와 연차점검을 연계한 사업 재구조화 본격 추진

- 각 지역은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재구조화 계획과 교육부 연차점검 종합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및 단위과제의 본격적인 재구조화를 추진할 예정임
- 향후에는 단순한 사업 수행실적보다 인재양성·취업·지역정주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 간 연계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에 환류하는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해질 전망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1차년도 연차점검 주요 사례>

구분	주요 우수 사례	주요 미흡 사례
협력체계	지자체-센터-대학 간 협력체계를 활용한 사업 발굴 및 소통	위원회 등 협력체계를 활용한 실질적 소통 부족
과제 선정	공모체계 운영 등을 통한 대학 간 경쟁 유도	선정기준 불명확 및 단위과제-대학 간 정합성 부족
지역성과	계약학과·기술사업화·지역현안 해결 등 지역특화 성과 창출	지역별·과제별 성과 창출 수준의 편차
성과관리	대학 특성별 컨설팅 및 차등 성과관리체계 구축	자율성과지표 타당성 부족 및 프로젝트·단위과제의 분절적 관리

정 혜 원 충남앵커센터 부연구위원

✓ **충남은 연차점검 결과와 자체평가를 연계하여 프로젝트-단위과제-성과지표 간 정합성을 재점검하고, 유사·중복 과제를 조정하는 등 성과 중심의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단위과제별 실적관리를 넘어 인재양성→취업→지역기업 유입→정주로 이어지는 성과체계를 관리하고, 평가결과가 차년도 사업기획과 재정배분에 실질적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성과측정·보상 협력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안부-SK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성과 측정하고 보상한다. 2026.09.30.

1. 행안부-사회적가치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30일 SK가 설립한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개별 기업에 적용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를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에 접목하여 적용 범위를 지역 혁신모델까지 넓힌다는 데 의미가 있음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성과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

2. 혁신모델 문제해결 성과 측정 및 성장지원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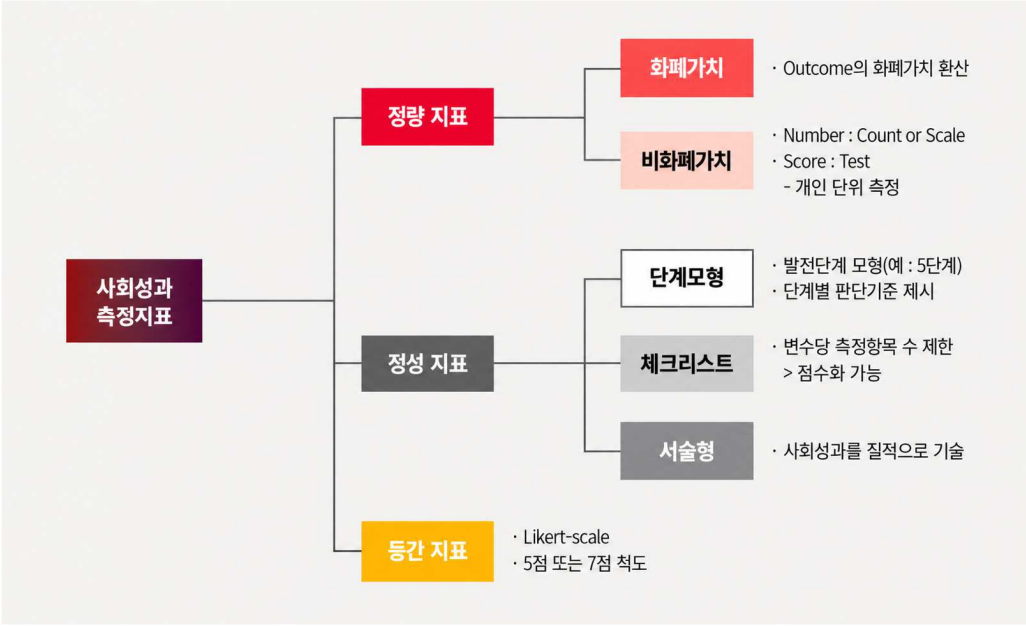
-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선정 지역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성과를 측정함
- 사회적가치연구원이 맞춤형 사회성과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성과를 측정·검증함
- 성과 수준에 따라 우수모델에 성장지원금을 제공하며, 2027~2029년 3년간 총 15억 원 규모로 협력함

3. 민간 전문성 접목을 통한 우수모델 확산

-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측정 대상을 개별 기업에서 지역 혁신모델로 넓혀 향후 지역·도시 단위의 사회적 가치 측정 기반을 마련함
- 행안부는 사업 선정·추진 지원과 함께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접목함

4.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혁신모델이 지역에 가져온 변화를 확인하고, 성과가 확인된 우수모델의 지속 성장과 확산을 지원할 계획임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회성과 창출을 이끌어 내고 우수모델 확산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전망임
- 행안부는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 성과를 성장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을 협약의 핵심으로 제시함



[그림] 사회성과 측정지표 유형

장 창 석 자치전략연구팀 부연구위원

✓ 충남도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에 대응하고, SPC 기반 성과측정·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충남도 사회연대경제 지원사업에도 사회성과 측정 지표를 도입하여 투입 중심 지원을 성과기반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백제세계유산 기반 청주국제공항 연계 글로벌 방한 관광 거점 육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선정…2029년 '입국 3000만' 목표. 2026.09.10.
충청남도 보도자료, 공주·부여 '전국 5대 관광권' 선정. 2026.09.11.

1.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이란?

- (개념) 지방국제공항을 단순한 입국 시설이 아니라 외래객 유치, 광역 이동, 체류·소비, 관광콘텐츠를 연결하는 지역관광의 관문으로 전환하는 국가 전략
- 김해, 대구, 청주, 양양, 무안의 5개 지방국제공항을 관문으로 삼아, 인근 도시들을 하나의 여행권역으로 연결하는 초광역 방한관광 육성 체계
- (목적)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수도권에 입국한 뒤 지방으로 이동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공항으로 직접 입국하여 해당 권역을 여행하도록 유도

2. 청주공항권에 청주, 공주·부여, 익산·전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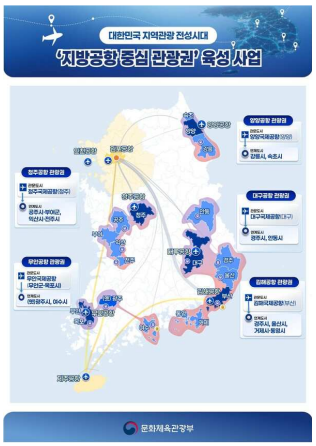
- 청주공항권은 청주의 문화·예술·쇼핑·MICE 기능, 공주·부여·익산의 유네스코 백제역사유적지구, 전주의 전통문화자원을 하나의 내륙 역사문화관광 동선으로 묶는 구조
- 청주공항의 입국 관문 기능과 충청·전북권의 역사문화 자원이 결합된 점이 선정의 핵심 근거로 작용
- 정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관광권별 중장기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관광권 중심 해외 마케팅, 지방공항과 항만 연계 방한객 유치, 교통망 확충 및 쇼핑 편의 증진, 특화 관광 콘텐츠 발굴 육성 등 추진 예정

3. 향후 전망

- 공주·부여는 청주공항권에서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백제왕도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대표 K-헤리티지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 예정
- 공주는 웅진백제의 왕도라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국립공주박물관 등 핵심 자원을 중심에 두고 역사·문화·야간관광 강화
- 부여는 사비백제의 도성 체계와 백제문화단지, 부소산성, 정림사지, 궁남지, 국립부여박물관, 금강 수변자원을 활용해 역사문화와 수변·야간·체험관광을 결합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

4. 시사점

- 국가 관광정책 단위가 개별 시·군과 개별 관광지에서 공항과 다수 도시를 연결하는 '관광객 이동권역'으로 이동
- 관광객 여정을 중심으로 입국, 이동, 숙박, 체험, 쇼핑, 결제, 출국을 하나의 연속된 서비스로 보려는 접근
- 앞으로는 지역관광의 성공 척도가 기존의 방문객 수 중심에서 '방문객이 이해하고, 이동하고, 머물며, 소비하는 경험의 완성도'로 결정될 가능성 시사
- 따라서 지역 간 연계와 통합의 초광역 협력 실질화가 관건이며, 지방정부 간 역할 조정과 공동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다자간 협의 및 공동 실천 필요



한 석 호 AI·혁신성장연구실 부연구위원

✓ 청주공항권의 외래객이 공주·부여에서 최소 1박 이상 머물고, 지역의 음식·숙박·상점·문화체험을 소비하며, 익산·전주 등으로 이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업의 실질적 목표가 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공주·부여를 충남 관광의 종착지가 아니라 충남의 다른 권역으로 외래객과 체류·소비를 분산시키는 '관문형 허브'로 설계하여, 충남 전역의 관광수요 확대 기회로 전환시키는 기회로 만들어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 농업예산 역대 최대 증가(22조 2,215억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업예산 역대 최대 증가, 농업농촌에 확실한 변화를 만든다' 2026. 09. 01.

27년 예산안 전년 대비 10.4% 증가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2조 853억원) 증가한 22조 2,215억원 규모로 편성
- 2000년 이후 증가액, 증가율 모두 최대 수준
  - 농식품부 예산 추이: (24년) 18조 3,392억원 ⇨ (25년) 18조 7,416억원 ⇨ (26년) 20조 1,362억원
- 27년 지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농지관리, 농산물가격 안정, FTA, 축산발전 4개 기금 누적된 채무 3.1조원 상환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등 국정과제 적극 실천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

- 공익직불 예산 3조원 시대 진입, 농가의 기초적인 소득 기반 강화
-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 부담에 경영비 안정망 구축
- 이상기후, 질병 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생산, 수급,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공동영농 확산과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개선
- 적정 생산 기반으로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 강화
- 생산자, 소비자 모두 이익되는 유통구조 혁신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

-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통해 농촌경제 활력 도모
- 교통, 돌봄 등 농촌의 필수서비스 확충
- 농촌공간 재편, 주거, 에너지 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정주기반 조성

인공지능, 첨단기술 활용, K-푸드 글로벌화

- 피지컬 인공지능,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생산성 혁신
- K-푸드 수출 확대와 한식 세계화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유망한 농식품산업 전략적 육성, 기업 성장 뒷받침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및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

- 국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촘촘한 국민 먹거리 돌봄 제공
  -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확대
- 동물보호, 복지기반 확충, 펫보험 활성화
  - 동물복지 정책 전담 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준비
  -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확대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확대
  - '(가칭) 동물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27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유 학 열 농정혁신연구팀 선임연구위원

✓ 충청남도에서는 국가의 농정 기조 및 예산편성을 고려한 2027년 세부사업 구상이 필요하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으로 설립 준비를 하는 '동물복지진흥원'의 충청남도 유치에 적극적인 행재정적 노력이 필요함

국토교통부

AI가 잇는 도시의 미래, 「K-AI 시티 실행전략」에 담다

- AI 서비스·인프라부터 국내외 화산과 법·제도까지 5대 핵심과제 제시
- '27년까지 기반 마련, '30년 전·후 시범도시 성과 창출·본격 확산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AI가 잇는 도시의 미래, 「K-AI 시티 실행전략」에 담다' 2026. 9. 9.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K-AI 시티 실행전략」 발표

-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K-AI 시티 실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따뜻한 미래도시 조성, ▲모두가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즐기는 도시,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
- 5대 핵심과제로 ①AI 혁신서비스 발굴, ②AI 시티 인프라, ③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④K-AI 시티 선도모델 확산, ⑤법·제도 기반 마련을 제시

'27년 AI시티 기반 마련, '30년까지 가시적 성과 창출

- '27년 법령 제·개정 등 AI시티 기반을 마련하고 '30년까지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 가시적 성과 창출 계획
- K-AI 시티의 성패는 그 기술이 도시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국민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뀌는지에 달려 있음
- 이번 실행전략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시티를 구현하고 AI가 도시를 이으면서 만들어내는 변화를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K-AI 시티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과제 추진

- **(AI 혁신서비스 발굴)** 도시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시티 + X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업 공모를 통해 민간 주도 국토교통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
- **(AI 시티 인프라 구축)** 데이터 수집·분석에서 현장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AI시티 기반 마련을 위하여 AI 인프라 체계*를 구상
  * 도시지능센터(두뇌), 데이터 파이프라인(신경망), 피지컬AI 및 지능형 시설물(신체)
-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AI 기술과 AI 인프라를 실제 도시 공간에 먼저 구현, 국민 일상에서 AI가 가져오는 도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추진
- **(K-AI 시티 선도모델 확산)** 개별 주체 중심의 기존 사업을 지방정부·기업·대학 등이 AI 서비스의 사업화와 인재 양성까지 함께하는 산업생태계 육성방식으로 개편
- **(법·제도 기반 마련)** K-AI 시티 조성·화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을 「인공지능·스마트도시법」으로 변경, 인공지능도시·도시데이터 등 핵심 개념을 정의, AI 특화 시범도시 지정·지원,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적 기반 마련

[K-AI 시티 실행전략]

목표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	
기본 방향	❶ 사람 중심의 따뜻한 미래도시 조성	
	❷ 모두가 AI · 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즐기는 도시	
	❸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	
세부 과제	AI 혁신서비스 발굴	❶ AI City + X 서비스 개발 ❷ AI 시티 기술로드맵 수립·운영 ❸ 도시 운영기술 개발(R&D)
	AI 시티 인프라 구축	❶ AI 시티 인프라 구상 ❷ 권역별 AI 시티 인프라 구축 지원 ❸ 스마트+빌딩 등 지능형 도시 시설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 운영	❶ 테스트베드형(기존도시) 시범도시 조성 ❷ 모델도시형(신도시) 시범도시 조성
	K-AI 시티 선도모델 확산	❶ (국내) 지역 AI시티 생태계 집중 육성 ❷ (해외) K-AI 시티 패키지 수출
	법 · 제도 기반 마련	❶ (단기) 규제샌드박스 개편 ❷ (중기) 스마트도시법 개정 등

(재)충남테크노파크

✓ **천안·아산 AI 특화 시범도시와 연계한 충남 기업의 AI 서비스 실증·사업화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천안·아산이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에 공동 선정됨에 따라,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 AI 서비스 개발·실증을 통하여 지역기업의 AI 서비스 개발·실증 및 기술 검증 기회 확대
- 도시 현장의 수요와 도내 기업의 AI·로봇·모빌리티 기술을 연계한 실증과제를 발굴하고, 실증 성과가 공공·민간의 서비스 도입과 타 시군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필요

산업통상부

제조 인공지능 전환 확산을 위한 규제혁신

출처: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M.AX 확산 위한 규제 빗장 푼다」, 2026.10.13.

1.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확산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13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I·로봇·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특례를 심의함
-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확산을 위해 데이터 확보부터 AI 기술 적용 및 상용화까지 전 단계의 규제·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신기술 도입과 실증을 지원할 계획임

2. AI·로봇 기반 신산업 실증특례 확대

- (4족보행 순찰로봇) 천안시 하천변 산책로와 공원에서 AI 기반 4족보행 순찰로봇을 실증하여 CCTV 사각지대 순찰 및 위험 상황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함
- (산업용 휴머노이드) 반도체·자동차·조선·물류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20대를 투입하여 부품 세척·운반·적재 등 제조공정 실증을 추진함
- (AI 사이버보안) 의료기관의 데이터 흐름을 AI로 분석하여 해킹 및 정보유출 위협을 실시간 탐지·대응하는 보안 플랫폼 실증을 추진함

3. 제조 AI 확산을 위한 선제적 규제합리화

- (제조현장 사이버보안)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AI 활용에 따른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8년 초까지 맞춤형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AI 가전 기술수준 표준화) AI 가전의 정의와 기술수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6년 말까지 표준안을 개발하고, 2027년부터 표준 제정을 추진함
- (규제개선 체계화) 산업현장의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분기별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제조 AI 전환을 지원할 계획임

4.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기존 안전기준과 인증제도의 제약으로 현장 도입이 어려웠던 AI·로봇 기술의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제조공정 자동화 및 산업현장 안전성 향상이 기대됨
- 향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신기술에 적합한 안전기준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제조업 전반의 AI 활용 확대와 신산업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임

4족보행 순찰로봇

반도체 공장 CRS 클리닝 실증 시나리오

김 양 중 AI·데이터연구팀 선임연구위원

✓ 충남은 천안시 4족보행 순찰로봇 실증을 계기로 AI 기반 공공안전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도내 산업단지 및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내 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AI·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수요를 발굴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AI 도입 및 사이버보안 대응을 지원하는 지역 차원의 M.AX 확산 전략 마련이 필요함

보건복지부

AI 시대 마음 건강 지키기,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첫 마련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AI의 위로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2026.10.08.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

- 생성형 AI의 역할이 학업·업무 도구에서 일상 대화, 감정 교감, 심리상담 상대로 확대
-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정신건강 정보, 정신질환 자가진단, 과의존 등 새로운 위험이 나타남
-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과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추진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으로 2종을 마련 (모든 이용자용,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

국민 정신건강 설문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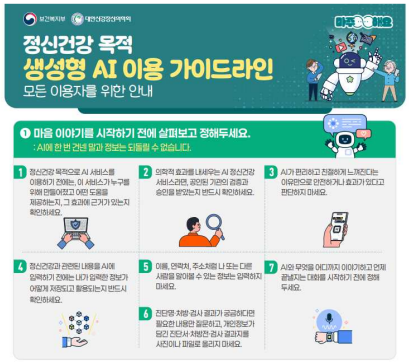
- `26.8.25~9.4., 15~79세 이용자 1,019명
- **(정서적 목적 이용)** 68.8%, 청소년은 69.2%
- **(과의존)** 대화를 중단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16.3%, 정신건강 목적 이용자에게서는 23.4%
- **(자가진단)** AI 답변을 의학적 진단으로 수용한 비율은 14.6%
- **(청소년)** 스스로 AI에 의존적이라는 응답이 51.7%로 전 연령 중 최고

3대 핵심 메시지

- **(이용 전)** 마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살펴보고 정해두세요
- **(이용 중)** 내 상태에 대한 AI의 말을 결론으로 삼지 마세요
- **(이용 후)** AI와 적정한 거리를 두고,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 아동청소년 권고 7개와 보호자 권고 7개를 별도로 제시함

향후 추진 계획

- 교육현장과 임상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주체적 AI 이용’ 교육 프로그램 마련
- 2027년에 중증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



이 상 우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초빙책임연구원

✓ 충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정신건강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 지역이 많아 AI를 정서적으로 의존할 위험이 큼

✓ 2024년 자살률 상위 10곳에 청양구(인구 10만 명당 60.3명, 전국 1위), 보령시(54.0명), 태안군(53.1명)이 포함되었고, 청양군은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의료 공백 지역임

✓ 도·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청 Wee클래스, 노인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고령층과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목적 AI 이용’ 교육을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함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추진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탄소 감축을 넘어 신성장동력으로」, K-GX, 관계부처 합동, 2026.10.7.
일본 경제산업성(METI), 「Japan Climate Transition Bond」, 2026.3.26.

1.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이란?

- (개념)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은 탄소배출의 감축을 넘어 산업구조 혁신과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국가전략임
- (추진방향) 신성장동력 K-GX, 모두의 K-GX, 지속가능한 K-GX를 3대 방향으로 설정하고, 2026~2035년 10년간 재정·기후금융 등 1,000조 원 규모의 지원 추진
- (정책목표) 산업 탈탄소화, 재생에너지 확대, 수송수단 전동화, 기후테크 육성 등을 통해 녹색전환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2. K-GX 주요 추진전략

- (산업구조 전환)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 등 5대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및 친환경 원료·연료 사용 확대
  - 5대 업종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
  - 2030년 30만 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기술개발, 저탄소 시멘트 및 저온난화지수(GWP) 공정가스 대체기술 개발 추진
- (에너지·산업 육성)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및 2035년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
  -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SMR·전력기기·전력반도체·히트펌프·수소·CCUS 등 10대 녹색산업 집중 육성
  - 기후테크 기업 실증 테스트베드 확대 및 유망기업 대상 최대 100억 원 규모 패키지 지원 추진
- (지역 GX 확산) 지역 산업특성별 녹색전환 추진, 탄소중립 선도도시 확대, 석탄발전 전환지역 정의로운 전환 지원

3. 해외 GX 추진사례 : 일본의 녹색전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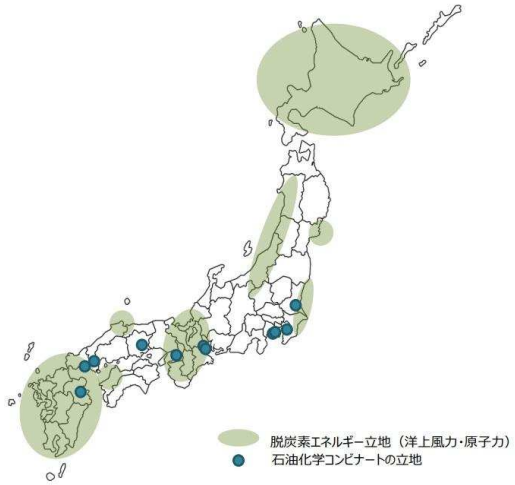
- 탈탄소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GX 추진전략」 및 「GX2040 비전」을 수립, 2023년부터 10년간 150조 엔 이상 민관 GX 투자 유도 목표 설정
- 약 20조 엔 규모 GX 경제이행채 발행, 기업의 선행투자 지원, 철강·화학 등 산업전환과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을 촉진
- 장기적인 재정지원과 탄소가격제·제도개선을 연계,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 및 민간투자 유도

4.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

- 정부는 2026~2035년 재정 200조원,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 재원을 투입하고, 민간의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약 220조 원의 투자를 추진
- 기후금융은 지방에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을 중점 배분하며, K-GX 관련 법적 기반 마련 및 범정부 협의체를 통한 이행관리 추진
- 향후 녹색전환 정책은 개별 감축사업에서 산업구조 전환,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의 통합정책화 전망

K-GX 주요 추진 분야 및 기대효과

구분	주요 내용	기대효과
산업 탈탄소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전환	온실가스 감축 및 산업경쟁력 강화
청정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수소·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 등 기반 확충	에너지 안보 및 전력공급 안정성 제고
녹색산업 육성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CCUS·기후테크 지원	신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지역 GX 확산	탄소중립 선도도시, 산업단지 실증, 정의로운 전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환 충격 완화



일본의 GX2040 비전의 산업입지 전략

이 상 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위원

✓ 충남은 석탄화력발전과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적 산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K-GX를 산업구조 전환과 지역 신성장동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① 철강·석유화학 저탄소 공정 전환 및 청정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 ② 산업단지 중심의 기후테크 실증·사업화 거점 조성, ③ 석탄발전 전환지역의 GX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국가 재정·기후금융과 민간투자를 연계하는 충남형 GX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함

해양수산부

내륙 지역 최초'국립청주해양박물관'개관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 최초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개관', 2026. 9. 29.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개관, 내륙에서 만나는 바다의 가치

- 전국 최초로 내륙에 들어선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총사업비 983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4,980㎡,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규모로 건립
- 디지털 아쿠아리움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연간 45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
- 바다와 접하기 어려운 내륙 지역 주민에게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 교육.체험 기회를 확대해 내륙 지역의 해양문화 격차 해소 및 중부권 대표 해양 과학시설로의 도약 기대

내륙 주민에게 해양 문화 및 교육 기회 확대

- 해양과학, 환경, 교육을 체험형 콘텐츠로 제공하여 내륙 주민의 해양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바다에 대한 이해와 미래 해양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교육.체험 거점으로 조성
- 특히 해양 에너지 발전과 스마트 양식, 선박의 원리 등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해양과학 분야도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전체 전시물의 75%를 체험형 콘텐츠로 마련

과학으로 본 해양, 해양에서 찾은 미래

-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등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해양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어가기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
- 주요 전시 공간으로는 기후변화, 해양오염, 자원 고갈 등 해양 문제의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미래해양전망관, 바닷속 다양한 해양생물을 실감형 영상을로 만나볼 수 있는 디지털아쿠아리움, 해양쓰레기 문제와 깨끗한 바다의 중요성을 놀이를 통해 체험하는 어린이해양체험관 등 마련

김 홍 수 물환경연구센터 연구위원

✓ 내륙 최초 국립 해양과학관을 청주에 개관하여 해양과학 체험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내륙 해양교육의 거점과 미래 해양인재 양성 기반 마련 기대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의적 아이디어 보유 인디게임 집중 지원" 콘진원, '코리아 인디게임 데브캠프' 3단계 진출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s://www.kocca.kr/kocca/koccanews/reportview.do?nttNo=1219&menuNo=204767

단계별 평가로 완성도 높은 인디게임 육성

- 데브캠프는 게임 기획부터 시제품(버티컬슬라이스) 제작까지 총 4단계에 걸쳐 평가와 지원을 이어가는 인디게임 육성 사업임.
- 단계별 진출팀을 선발해 개발 장려금을 지급하고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창작자의 개발 역량을 높이고 완성도 높은 인디게임 제작을 돕는 것임.

기술 자문·전시·투자 연계 강화

- 3단계 진출팀에는 분야별 심층 자문을 제공해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장 진출을 뒷받침함.
- 앞서 1단계에서는 개발 세미나, 2단계에서는 멘토링을 제공했으며, 최종 4단계 진출팀은 오는 12월 판교에서 열리는 현장 전시회 '코리아 인디게임 쇼케이스'에 참가해 관람객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직접 개발작을 선보이게 됨.

130개 팀 전체 후속 성장 지원

- 콘진원은 3단계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선정된 130개 팀 전체를 대상으로 후속 지원을 이어감.
- 맞춤형 멘토링, 인디게임 시장 동향 제공, 산업 행사 참관, 투자·퍼블리싱 연계 등을 제공해 모든 참가팀이 개발을 이어가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임.

(재)충남콘텐츠진흥원

✓ 충남 지역 인디게임 개발자 및 예비 창작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개발·멘토링·기술 자문을 지원하는 지역형 인디게임 육성체계 구축이 필요함.

✓ 지역 게임기업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전시·투자·퍼블리싱 등 후속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인디게임의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

서울런, 충주로 잇다... 교육격차 해소·농업 상생 지역교류 협력

출처: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6.9.30.), 「서울시, 충주와 교육 잇고 농업으로 상생...서울런 협약·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요) 서울런 모델 지역 확산, 충주시와 8번째 지방정부 협력

- 서울시는 충주시와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런 플랫폼과 운영 경험을 공유해 '충주런' 도입을 지원
- 서울런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배움의 출발선이 달라지지 않도록 '21년 시작한 교육복지 정책, 협약은 서울런 모델 지역 확산을 위한 8번째 지방정부 협력

(사업내용) 서울런 플랫폼 공동 활용 충주 교육취약계층 고교생 250명 우선 지원

- 서울시는 서울런 플랫폼과 사업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충주시는 '27년 하반기부터 관내 교육취약계층 고등학생 250명에 게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우선 지원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 서울런은 온라인 학습 콘텐츠에서 출발해 대학생 1:1 멘토링, 진로·진학 상담, 체험·성장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넓혀 왔으며, 지난 5년간 학생 4만 4천여 명이 이용
- 충북·평창·김포·인천·태백·예천·영암 등 7개 지방정부와 기 협약하여, 현재 약 3,100명의 지역 학생이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교육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

(사업내용) 청년농업인 현장 간담회 진행 특산물 '탄금향' 서울 판로 확대 논의

- 협약에 앞서 기후변화 대체작목으로 중북부 최초 재배에 성공한 만감류 '탄금향' 청년농업인 농장을 방문해 생산·판로 확대 과정의 애로사항 청취
- 충주 농산물의 서울 판매·홍보, 상품 개발 등 공동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서울 소비시장과 충주 농업자원을 연결하는 상생협력 추진 계획
- 충주시민·공무원 200여 명 대상 '삶의 질 특별시, 서울' 특강을 통해 운동·건강·여가, 외로움·고립감, 자존감·성취감 3개 축 정책과 창의행정 사례 공유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대입 합격 역대 최다· 사교육비 절감...교육·농업 연계 상생 모델로

- '26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런 이용자 914명이 합격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25년 조사에서 이용 가구의 61.3%가 사교육비 감소, 월평균 34만 원 절감으로 나타남
- 서울시는 교육 플랫폼 공유에 더해 지역 농산물 판매·판로 확대 등 실질적 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서울과 지역이 강점과 자원을 연결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관계로 발전시킬 계획

(관련 사진)

▲서울시-충주시 서울런 업무협약 체결('26.9.29.)

박 수 경 충남앵커센터 선임연구원

✓ **도내 교육취약계층·농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검증된 광역 교육플랫폼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충남 RISE 사업의 늘봄 및 계약학과 단위과제와 연계해 '충남형 교육사다리'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간 교육협력을 계기로 농산물 판로·청년농업인 지원 등 '패키지형 지역교류'를 광역지자체-지자체와 공동설계하고, 일회성 협약이 정례화된 5극3특 초광역 상생협력 모델로 전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클러스터 본궤도 올라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보도자료('26.10.15)

(개요)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전력투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
  - 시장 주도로 '호남에 반도체 투자 안 될 것'이라는 회의론 불식 노력
  - 기업의 요구사항을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반영,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부지와 기반시설 공급 일정 구체화, 인허가와 각종 지원 절차의 신속한 처리 추진 등
-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행정력 강화를 활용하여 산업기반 조성에 노력
  - 반도체 기업 앰코의 투자·증설로 인한 하수처리시설 용량 한계를 장성군 공공폐수처리장과 연계하여 해결
  - 광주광역시-장성군의 통합으로 인한 용이한 처리

(사업내용)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경과

- 정부, 호남권 반도체 팹 4기 조성 800조 투자 발표('26. 6. 2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 제정('26. 7. 1.)
- 「전남광주특별시 반도체 전략위원회」 출범('26. 7. 1.)
- 정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광주 군공항 부지 최종 확정('26. 7. 6.)
- 군공항부지,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26. 7. 29.)
- 산업부, LH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 / LH, 10월 설계 착수 목표('26. 7. 30.)
- 반도체 산단 용수사업('26. 8. 25.) 전력망사업('26. 9.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무회의 의결
-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 현장 방문('26.10.9.)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현장방문('26.10.12.)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현장방문('26.10.14.)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현장방문('26.10.15.)

(향후 추진계획) 신속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노력

- 2030년 6월 초도양산 목표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하고 광주군공항 부지 중 우선 활용 가능한 63만평부터 공사
  - 2027년 인허가·설계, 2029년 1차 팹 완공 계획
- 살기 좋은 반도체 도시 정주여건 전담팀(TF) 마련하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새로운 산업·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경주

(관련 사진)

김 준 혁 과학기술진흥본부 선임연구원

✓ **충남도는 세계적 디스플레이 생산의 중심지이자 천안·아산에 삼성 HBM 공장이 소재하고 있어, 향후 첨단패키징 거점화를 두고 전남광주 지역과의 경쟁이 예상**

✓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상위 소수 1차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2·3차 벤더로 갈수록 앵커 의존 매출 비중이 높으며, 협력사 매출이 앵커의 설비투자와 연관되어 있는 경기 취약형 구조**

- 사각패널 등 기존 디스플레이 역량 활용 가능 분야에 충남의 소·부·장 반도체 역량을 집중, 구조 개선 필요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2만 4천 명 돌파한 부산, 유치에서 지역정착까지 원스톱 지원

출처: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부산시, 외국인 유학생 2만 4천 명 돌파... 외국인 유학생 통합 지원 허브 중심 원스톱 지원 성과! 2026.09.22

외국인 유학생 2만 4천 명 돌파, 지역인재 확보 기반 확대

-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2024년 1만 4,961명에서 2025년 1만 8,630명, 2026년 2만 4,328명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
- 부산시는 2028년 외국인 유학생 3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전략국가 공략, 유치국가 다원화, 취업비자 연계 등을 추진하며 단순 유치를 넘어 지역 취업·정착까지 연계하는 정책으로 확대

'My Busan' 기반 온·오프라인 전주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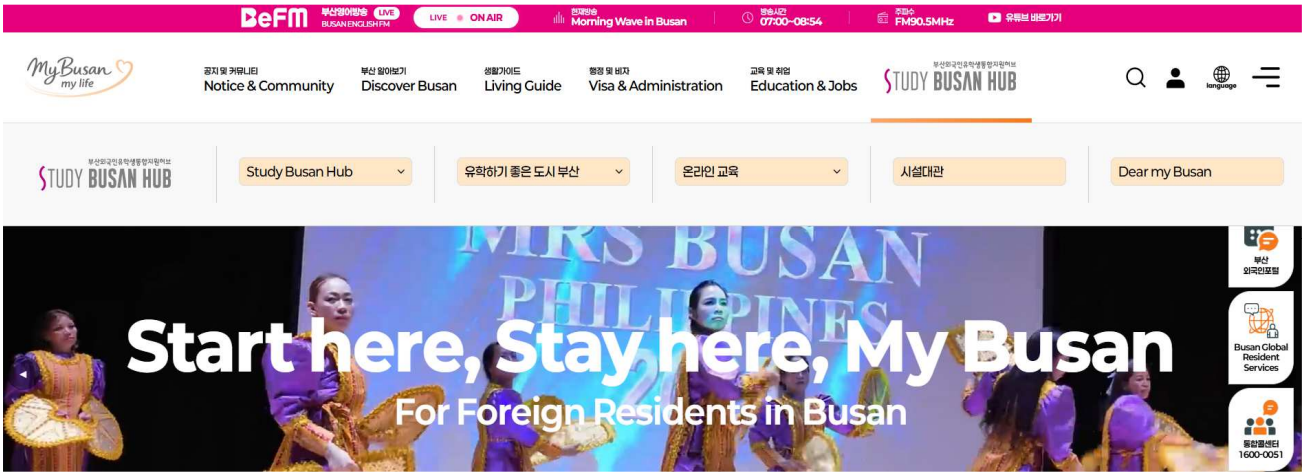
- 외국인 통합 플랫폼 '마이부산(My Busan)'을 전면 개편하여 생활·행정·비자·의료·교육·취창업·정착지원·대학정보 등을 57개 언어로 제공하고, 외국인 유학생 전용 'Study in Busan' 카테고리 신설
- 오프라인 통합지원 허브와 온라인 플랫폼을 연계하고 광역형·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 전담 거점병원, Global Busan Scholarship(GBS) 등을 활용하여 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취업·정착 기반 강화

대학별 분산 지원에서 지역 단위 통합지원체계로 전환

- 2026년 2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과 연계한 '부산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허브(Study Busan Hub)'를 개소하고, 대학별로 분절·중복되던 유학생 지원 기능을 지역 단위 통합지원체계로 전환
- 통합지원 허브를 중심으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대학, 의료·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비자·금융·의료·한국어교육·문화적응·취창업 등 유학생의 입학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유치에서 취·창업 및 지역정착으로 정책 범위 확대

-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지역기업 취업, 창업, 비자, 생활정착을 포괄하는 질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대학·지자체·관계기관 간 협력 기반을 지속 확대
- 외국인 유학생을 대학의 국제화 자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산업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연결하는 '유학생 유치 → 지역대학 교육 → 취·창업 → 지역정착'의 선순환형 지역인재 정책 추진



부산광역시 외국인통합플랫폼 '마이부산(My Busan)' 홈페이지

신 주 희 충남앵커센터 선임연구원

✓ 충남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를 기반으로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유치·교육사업을 단순 확대 하기보다, 전공–지역기업 직무 매칭, 현장실습, 취업비자 전환, 지역 취업 및 정착까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도 차원에서는 출입국·비자·한국어·생활·취업정보와 지역기업 채용·직무정보 등 공통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시·군과 대학은 지역산업 수요에 맞춘 기업 매칭과 현장실습·취업 연계를 강화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산업 인재로 성장·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경상북도·대구광역시

대구·경북, 공동교육과 통합 취업지원으로 첨단산업 인재양성 추진

출처: 경상북도, 「경북도, 첨단산업 인재 양성 국비 960억 원 확보」, 2026.9.8.; 국립금오공과대학교, 「2026년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 선정」, 2026.9.10.

(개요) 산업·경제권을 기반으로 초광역 인재양성 체계 구축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2026년 9월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에 선정되어 반도체 첨단소재·부품과 AI 제조로봇 분야의 융합인재 양성 추진
- 경북을 주관지자체, 대구를 참여지자체로 하여 대학과 기업의 역량을 연계하고, 공동교육부터 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사업내용) 대학 간 공동교육과 기업 현장과제 연계

- 국립금오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8개 대학, 6개 협업기관, 15개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 '원 캠퍼스' 체계를 통해 대학 간 학사제도와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기업의 현장문제를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캡스톤디자인 등 정규 교과에 반영하여 산업 수요에 맞는 실무역량 강화
- '원 커리어' 체계를 통해 대학별 직무·역량 정보와 AI 매칭 기능을 통합하고, 대구·경북을 하나의 취업권으로 연결하여 취업·창업·정주 지원
- '원 체인' 체계에서는 대학 기술의 기업 현장 검증과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회수한 재원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기술사업화 선순환 구조 마련

(사업내용) 통합 취업지원과 기술사업화로 지역 정착 유도

- '원 커리어' 체계를 통해 대학별 직무·역량 데이터베이스와 AI 매칭 플랫폼을 통합하고, 학생의 역량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연결하는 공동 취업지원 기반 마련
- 대구·경북을 하나의 취업권으로 묶어 대학별 지원체계를 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채용·창업·정주를 연계하여 양성된 인재의 지역 정착 유도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30년까지 융합인재 3천 명 양성 목표

- 2026년 9월부터 2030년 2월까지 국비 600억 원과 지방비 120억 원 등 총 720억 원을 투입하여 반도체 소부장·AI 제조로봇 융합인재 3천 명 양성 추진
- 4차년도 기준 성장엔진 분야 취업률 60%, 지역 취업률 50%, 기술이전·창업 95건, 기업 공동프로젝트 60건을 목표로 교육·취업·사업화 연계 강화

(관련 사진)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 융석 체계도

대경권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 설명회

권 대 훈 충남앵커센터 선임연구원

✓ **충남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학별 특화역량을 연계하고, 기업 현장과제를 반영한 공동교육과 초광역 취업지원 체계 강화 필요**

✓ **앵커사업의 성과관리를 교육 이수에서 산업 분야 취업·지역 정주·기술사업화까지 연결하여 인재양성의 지역 기여도 제고**

인천광역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K-바이오 랩허브 착공으로 전주기 혁신생태계 구축 본격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K-바이오랩허브 인천 송도에 '첫삽', '바이오 스타트업 혁신 거점으로'」(2026. 9. 30.)

전주기 바이오 혁신생태계로 전환

- 인천 송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 집적을 기반으로 국내 대표 바이오의약품 생산거점으로 성장
- 최근에는 창업, R&D, 인재양성, 투자 연계 기능을 강화하며 전주기 혁신 클러스터로 확장
- K-바이오 랩허브 착공,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운영, 바이오 얼라이언스 출범 등 관련 정책 본격화

① K-바이오 랩허브 중심 창업, R&D 지원 강화

- 26년 9월 30일 K-바이오 랩허브 착공, 총사업비 2,240억 원, 2029년 준공 목표
- 약 60개 바이오벤처 입주 예정, 연구공간·고가 장비 공동활용 지원
- 후보물질 발굴-임상·인허가-투자유치-글로벌 진출까지 성장 전주기 지원
- 지역 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병원, VC 인프라와 연계해 집적효과 극대화 예정

② 기업 수요형 인재양성과 협력 거버넌스 확대

-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를 기반으로 K-NIBRT 교육과 GMP 실습 등 현장형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강화
- 산업·대학·연구기관·병원·금융·투자기관 등이 참여하는 '인천 바이오 얼라이언스' 출범
- 2027년 1월 '인천바이오포럼' 공식 출범을 통해 산·학·연·관·병 협력체계를 완성하고 중장기 바이오산업 성장전략을 구체화할 계획

③ 대기업 생산능력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강화

- 삼성바이오로직스, 총 84.5만L 생산능력 확보 및 송도 6~8공장 추가 건설 추진
- 셀트리온, 송도 25만L 생산시설 EU-GMP 갱신 및 2026년 생산량 15% 확대 예정
- 대규모 생산기반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 강화

향후 추진방향

- 송도는 생산 중심 바이오클러스터에서 창업·R&D-인재양성-생산이 연계되는 전주기 혁신생태계로 확장
- 협력 거버넌스와 지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바이오 산업 거점 기능을 강화할 전망

K-바이오 랩허브 조감도

임 성 아 충남앵커센터 선임연구원

- ✓ 충남의 신성장동력산업 및 AI 등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거점사업을 발굴하고, R&D-인재양성-창업-사업화를 연계한 전주기 혁신생태계로 확장할 필요
- ✓ R&D·인재양성·취·창업 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이 필수적인 만큼, 앵커사업과 연계한 산학공동 R&D, 기업수요 기반 교육 및 현장실습 등 지역혁신 인재양성체계 강화 필요

대전광역시

대전시, AI혁신전략위원회 출범으로 시정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 추진

출처 :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대전시, 인공지능 정책 이끌 'AI혁신전략위원회' 출범」. 2026.9.11.

산·학·연 전문가 참여로 인공지능 정책 추진체계 마련

- 대전시는 9월 10일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성과 평가, 제도 개선 및 기반 확충 등을 논의하는 'AI혁신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시정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체계 구축
- 대전시장과 KAIST 연구부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 및 시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

시정 전반의 AI 전환 실행력 강화로 인공지능 선도 도시 성장 추진

- AI 정책 총괄기구 및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부서 간 정책 연계 및 협업 기반 강화
- 향후 AI 기본 조례 제정, 분야별 실행과제 구체화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시정 전반의 AI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AI 정책 총괄 거버넌스 및 추진 기반 강화

- AI혁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주요 사업 검토, 성과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시정 전반의 AI 정책 총괄·조정 핵심 기능 수행
- 대전시 인공지능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3급 AI혁신국을 중심으로 부서별 AI 정책의 연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대전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분야별 AI 전환과제 발굴 및 실행체계 구축

- 사회·행정, 도시·안전, 과학·산업, 교육·인재·윤리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AI 정책 발굴 및 전문가 자문체계 운영
- 방산 AX 클러스터 조성, AI 반도체 거점 육성, 스마트 재난·안전망 구축, AI 스마트 행정 혁신 등 주요 분야별 AI 전환과제 구체화 추진

서 교 리 과학기술진흥본부 선임연구원

✓ 대전시의 AI혁신전략위원회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충남 AI특별위원회의 정책 조정 및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분야별 추진과제의 발굴부터 실행·성과관리까지 연계하는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AI 정책 추진체계가 필요함

✓ 충남의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부품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AI 전환과제를 구체화하고, 산·학·연 전문가 협력과 현장 실증을 연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AI 전환 성과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울산광역시

산업 인공지능전환(AX) 연결거점 구축, 제조AI 대전환 및 초광역 협력 본격화

출처: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울산시, 산업 인공지능전환(AX) 실증사업 본격화', 2026.9.22. / 전자신문, '울산시, '산업AX NEXUS 실증단지' 조성', 2026.9.23. / 해럴드경제, '울산시, 산업 인공지능전환 본격화'. 2026.9.22. / 서울Pn, '전남광주·울산, AX 초광역 협력 '맞손'', 2026.9.29.

울산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을 제조현장에 접목하는 산업 인공지능전환(AX) 핵심전략 추진

-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국가 주력 제조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산업 인공지능전환(AX) 실증사업 본격 추진
- 현재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AI 관련 사업 : 100여 건, 총 1조 4,947억원 규모 / 이중 제조현장에 AI기술 적용·검증하는 산업AX실증사업은 14건, 6,087억원 규모
- 개별 산업·기업 단위의 AI 기술 도입을 넘어 AI 기술개발과 데이터·연산 인프라, 제조현장 실증 및 사업화를 연계하는 전주기 산업 AX 생태계 구축 추진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중심의 산업 AX 실증 본격화

- 자동차산업 : 다양한 차종을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AI 기반 자율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조 AI와 로봇·자동화 기술을 생산현장 적용
- 조선산업 : 설계에서 생산까지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하고, 용접·검사·정비 등 핵심 제조공정에 AI와 로봇 기술을 결합하는 현장 실증 추진
- 석유화학산업 : 산업현장의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정 최적화 및 설비 예측진단에 특화된 AI 모델을 구축하여 생산효율성 및 설비운영 안정성 향상 추진

AI 기술개발-인프라-실증-사업화를 연결하는 '산업 AX NEXUS' 구축

-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 AX 사업을 하나의 공간과 체계로 연계하는 '산업 AX 연결거점(NEXUS) 실증단지' 조성 추진
- 산업 AX NEXUS : 'AI 기술개발 → 데이터·연산 인프라 제공 → 제조현장 실증 →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전주기 AX 집적·거점으로 조성

울산-전남광주 초광역 협력 생태계 구축

- 울산은 지역 내부의 산업 AX 생태계 구축과 함께 전남광주와 자동차·AI·로봇·자율주행·에너지 분야를 연계하는 초광역 산업협력 체계 구축 추진
- 양 지역은 2026년 9월 28일 미래동반성장 우호협약을 체결하고 제조혁신 사업 공동 추진, 자율주행 기술개발·실증 및 데이터 확보, 재생에너지·수소·이차전지 산업 공동 육성 등에 협력 합의
- 울산의 자동차 제조역량과 전남광주의 AI·로봇 기술역량을 연계하여 '울산-전남광주 휴머노이드 기반 자동차산업 제조 AX 지원사업' 추진계획
- 울산광역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울산대학교·UNIST·전남대학교·GIST 등 4개 대학이 참여하는 6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핵심기술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양성 추진
- 울산이 보유한 제조현장·생산설비·산업데이터와 전남광주의 AI·로봇 연구개발 역량을 상호연계함으로써 개별 지역의 산업·기술적 강점을 결합하는 초광역 산업 AX 생태계 구축 기대

연번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27년국비
		총 계	6,087	631
1	신규	울산-광주 휴머노이드기반 자동차산업 MAX 전환 지원사업('27~'31)	580	45
2	계속	초거대산업 AI 연구지원사업('26~'30)	403	60
3	계속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26~'30)	2,531	174
4	계속	협동로봇 기반 조선 공정 AI 자율제조 개술개발('24~'27)	39	7.5
5	계속	고가변하중 이동식 로봇팔 기반 셀조립 자율생산 시스템 개발('25~'29)	193	24
6	계속	AI 기반 함정MRO용 자율작업 로봇시스템 개발('25~'29)	109	15
7	계속	로봇용접 및 AI 기반 영상 PAUT 복합검사 시스템 개발('25~'28)	110	9.5
8	계속	탄소저감형 수중데이터센터 실증모델 개발('26~'30)	511	68
9	계속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지원사업('23~'27)	190	18
10	계속	울산 석유·화학 AX 실증산단 구축사업('25~'28)	291	60
11	계속	미래모빌리티 정밀화학소재 실용화('25~'30)	237	35
12	계속	AI선박기자재 및 첨단부품 실증 지원센터 구축('26~'30)	382	59
13	계속	AI선박 특화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실증('26~'29)	402	34
14	계속	미래모빌리티 첨단코팅소재 산업고도화 및 자율 실증 기반 구축사업('26~'29)	109	22

※ 3번 4극3특 과학기술혁신 지원사업은 동남권 전체 예산임

울산 산업AX 실증사업 추진 현황

윤 성 준 과학기술진흥본부 선임연구원

✓ 충남에서도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기반으로, 산업별 AI 기술개발과 제조데이터 구축, 현장실증 및 사업화를 연계하는 '충남형 산업 AX 실증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중소·중견기업까지 AX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지원기반 마련 필요

✓ 충남의 실증·사업화 역량과 대전의 과학기술 연구 역량을 결합하는 '대전-충남 산업 AX 협력 생태계' 제안

충청북도

바이오 대전환과 정주혁신 – 첨단산업, 인재, 생활인구 전략

출처 :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시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2026.9.)

산업·과학기술

- **(바이오 대전환)** 9월 9일 'NEXT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 3대 전략, 89개 사업에 3조 1,062억 원을 투입
- **(공간 확장)** 오송 바이오 집적지를 오창 및 도내 11개 시·군과 연계하여 광역 혁신권으로 확장
- **(인재 양성)** 도와 교육청이 '(가칭) KAIST 부설 AI·BIO 영재학교'의 건립·운영비 분담에 합의. 급식 식품비는 교육청 47%, 도·시·군 53%로 분담
- **(교육혁신)** 교육청과 11개 시·군이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 공동 대응(선정 시 최대 5년간 국비 100억 원 지원)

» 산업 투자와 미래인재 양성을 연계한 추진체계 구축

첨단 연구인프라

- **(가속기 활용)** 9월 정책연구용역 심의에서 한국새빛가속기 초과부지 활용방안 수립 연구를 심의·반영
- **(산업 연계)** 연구시설과 연계한 부지를 첨단기업 유치, 연구개발, 사업화 공간으로 쓰도록 기획
- **(정책기획)** 연구용역 31건(34억 8,600만 원)을 심의·조정해 7억 2,000만 원을 절감했고, 향후 도정 현안의 정책기획 기반을 마련

» 대형 연구시설을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의 거점으로 전환

문화·관광

- **(전통공예 활성화)** 청주시는 9월 17일~27일 문화제조창에서 '2026 청주전통공예페스티벌'을 개최
- **(유산의 일상화)** 대목장·야장·궁시장·악기장·배첩장·칠장 등 충북의 국가·시·도 무형유산 보유자와 이수자가 참여해 전시·시연·체험·공연을 운영
- **(도시재생 연계)** 문화제조창과 동부창고 등 기존 산업·창고 공간을 공예문화 거점으로 활용해 지역 문화자산과 도시재생, 관광 소비를 결합

» 전통문화 행사를 지역문화 플랫폼으로 운영

인구·정주

- **(5개년 계획)** 9월 18일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조 6,546억 원을 투입
- **(통합 정책)** 일자리·주거·의료·교통·관광을 아우르는 4대 전략, 16개 과제, 70개 사업으로 구성
- **(생활인구 확대)** 청년·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취약지역 산부인과·소아 의료, 충북형 광역버스 도입, 청풍호 웰니스 장기체류 마을 등을 추진

» 인구정책을 '방문–체류–정착'으로 이어지는 연속 과정으로 확장

강 수 아 과학기술진흥본부 선임연구원

✓ **충청권 공동 대응과 충남의 선택적 특화전략 병행 필요**

충북은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바이오, 가속기, AI를 결합해 첨단산업 거점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충남은 반도체 후공정,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등 강점 분야에 집중해야 함. 정부의 글로벌 AI 허브 공모,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은 충청권 공동 의제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산업 + 인재 + 정주정책'의 지역혁신 패키지화 필요**

충북은 바이오 투자, AI·BIO 영재학교, 인구감소 대응계획을 연계해 산업과 인구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음. 충남도 기업 유치가 청년 고용과 교육·주거·의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도–교육청 간 중장기 재정분담 체계와 시·군 연합형 국비 공모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주차장 위험 감지·민원 분석에 인공지능 도입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공영주차장 위험 감지·민원 분석에 인공지능 도입」, 2026.10.12.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기반 AI 서비스 실증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20억 원 규모의 AI 기반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추진
- 교통·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와 AI 기술을 연계하여 공영주차장 내 위험상황 및 반복적인 주차민원 해결 도모
- 2026년 11월까지 공영주차장 안전관리와 주차민원 분석 등 2개 서비스를 구축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기능 및 효과 검증 계획

AI 기반 공영주차장 위험상황 조기 감지체계 구축

- 제주시 실내 공영주차장 3곳을 대상으로 AI와 감지센서를 연계한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 실증 추진
- 불꽃·이상 소리 등 위험요소를 실시간 감지·분석하여 전기차 화재 등 주차장 내 위험상황 조기 인식
- 위험상황 발생 시 주차관제센터를 통해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대응체계 구축
- 기존 관제체계에 AI 기반 자동 감지·분석 기능을 접목하여 위험상황 대응의 신속성 및 주차장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기대

생성형 AI를 활용한 주차민원 자동 분석체계 도입

- 120콜센터 및 도내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 등 주차 관련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AI 분석 서비스 구축
- 개인정보를 제외한 민원데이터를 AI가 유형별로 자동 분류·분석하고, 반복 민원의 발생 특성 및 주요 문제점 파악
- 분석 결과를 통계자료와 정책보고서 형태로 제공하여 행정시 관계 부서의 주차문제 해결 및 정책 수립 지원
- 민원처리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반복 민원 진단 및 정책 개선으로 행정서비스 고도화 추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데이터 활용 분야 확대

- 2026년 11월까지 서비스 구축 및 현장 검증을 완료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AI 분석 기능과 서비스 운영체계 보완 계획
- 향후 환경 등 다양한 도시 분야로 데이터 수집·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생활밀착형 도시문제 해결 서비스 지속 발굴

(관련 사진)

유 승 우 과학기술진흥본부 선임연구원

✓ **충남도는 공영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AI 기반 위험 감지·관제체계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시군통합관제센터와 소방 등 관계기관의 정보 연계 및 공동 대응체계 마련 필요**

✓ **또한 도내 주차·교통 관련 민원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AI 기반 생활민원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반복 민원 발생지역 및 유형을 파악하고, 주차환경 개선과 선제적 도시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